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제 막 시작되고 있을 뿐이다.

#### 물질적·인적 피해

한국전쟁으로 입은 물질적 손실과 인명 손실은 엄청나다. 우선 인명 손실에서 보면, 당시 남북의 인구는 대략 3천만명 정도였는데 그 가운데 사상자 수는 6백만명 이상 되었다. 이것은 남북한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결국 5명 가운데 한 명이 죽거나 다쳤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당시의 가족 관계로 볼 때 1가구당 최소한 1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가 된다. 아마도 '그토록 짧은 기간에 그토록 좁은 영토에서 그토록 많은 인명이 손상한' 예는 그 어디에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전쟁에서 입은 인명의 손실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남한은 민간인 사망 37만 3천599명, 부상 22만 9천652명, 실종 38만 7천744명이며, 군인 사망은 22만 7천748명, 부상 71만 7천835명, 실종 4만 3천572명으로 민간인과 군인을 합하여 198만 9천398명의 인명 손실을 보았다.

이에 북한은 민간인 사망 40만 6천명, 부상 159만 4천명 실종 68만명이며, 군인은 사망 29만 4천151명, 부상 22만 5천949명, 실종 9만 1천206명으로, 민간인과 군인을 합하여 329만 1천206명의 인명 손실을 보았다.

유엔군은 사망 3만 6천813명, 부상 11만 4천816명, 실종 6천198명, 중국군은 사망 18만 4천128명, 부상 71만 5천872명, 실종 2만 1천836명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한국전쟁의 인명손실은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하여 사망이 152만 2천439명, 부상 359만 7천372명, 실종 123만 556명에 이르는 엄청난 것이었다. (조성오 「우리역사 이야기 3」, 둘째개, 120쪽 참조)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명 손실 가운데는 민간인의 비율이 그 어느 전쟁보다도 엄청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으레 전쟁이란 잔혹하고 비인간의 극치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한국전쟁만큼 그러한 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우도 드물다. 한국전쟁에서 민간인의 피해가 극심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이유가 있다.

한국민은 남한 정권과 북한 정권, 그리고 미국과 소련, 그 어느 쪽으로부터도 안전하게 피할 수가 없었다. 한반도의 하늘을 장악한 미공군에게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공격대상이었고, 전쟁의 공방이 치열하고 전진과 후퇴, 역전과 재역전이 너무도 빠르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대중들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이런 과정에서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얹히고 말았다. 때로는 개인, 가족과 마을, 가문과 공동체 등 전쟁의 적 대성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다. 그리고 이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비인도적 범죄 행위가 저질러졌고, 그것이 민간인의 피해를 엄청나게 만든 한 요인이 되었다.

인적 손실만이 아니라 물적 손실 또한 엄청났다. 거의 완벽한 파괴, 그래서 폐허라고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도로·교통시설, 주택·철도·항만 등 사회간접 시설은 거의 대부분 훼손만 남은 상태였다. 인적 피해도 그렇지만 물적 피해도 역시 북한 지역이 더 심했다.

북한 지역의 대부분의 도시와 촌락들은 그 모습조차 찾을 수 없는 곳이 허다 했다. 심지어 "전쟁이 끝난 후 평양시에는 형체를 온전하게 보존한 집이 단 두 채밖에 없었다"고 할 정도로 북한 지역은 철저히 파괴되었다. 물론 그 파괴의 주된 담당자는 미국이었다. 미국의 작전은 초토화를 넘어서 '원시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 목표'라고 할 정도로 철저한 파괴였다.

그 결과 '남한은 농업, 북한은 공업'이라는 말은 쓸모가 없을 지경이 되었다. 북한 지역의 피해가 어느 정도 극심했던가는 전쟁 이전과 이후의 생산능력을 비교해 보면 금세 드러난다.

전쟁이 끝난 뒤 북한의 생산력을 전쟁 직전인 1949년과 비교하면 "전력은 74%, 연료 공업은 89%, 야금업은 90%, 화학 공업은 77%가 감소"했고, 철광석, 시멘트, 화학비료 등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다른 분야도 파괴 정도가 비슷했다. 남한은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했지만 그 피해가 결코 적은 것은 아니었다.

이렇듯 집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국사회가 사회적 모

순과 민족적 모순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데 실패하고 식민지를 거쳐 분단사회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즉, 한국민족은 근대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영국이나 프랑스 또는 미국이나 러시아, 독일, 일본 등이 치러야 했던 혁명과 전쟁을 거치지 않았다.

그 대신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했고, 그 과정에서 봉건적 모순과 식민지적 모순이 덧쌓였다. 그런데다가 해방과 함께 미·소 강대국에 의해 분단되었으며, 국제적인 냉전체제의 최일선이 되어야 했다. 그러다 보니 한국전쟁은 다른 나라들에서 수세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소되어 온 수많은 모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전쟁이 돼 버렸다. 그것은 시간 면에서 몇 세기를 압축한 결과였고, 전쟁은 규모 면에서 엄청난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분단체제의 고착화와 국가기구의 비대화

한국전쟁은 '통일을 위해' 시작했다.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박헌영과 북한지도집단은 '통일을 위해' 전쟁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전쟁 결과는 그 의도와는 달리 분단을 고착화시켰다.

박명립은 이를 두고 "최초의 목표를 정반대로 굳혀줘 (통일을) 불가능하게 한 이런 전쟁은 근대 이후의 인류 역사상 거의 없다는 것이 한국전쟁이 역사에 행한 하나의 역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1948년 두 개의 분단 국가가 탄생했을 때만 하더라도 "분단이 비교적 유동적이고 잠정적이었지만 전쟁이 끝난 1953년에는 분단이 고정적이고 항상적인 것"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전쟁은 남과 북을 전혀 이질적인 사회로 바꾸어 놓았다. 정치·경제·사회·문화는 물론이고, 개인과 집단의 의식구조와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상호에 대한 엄청난 물리력과 적대감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으로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심이 가슴에 쌓아갔고,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지녀왔던 동족의식이나 민족의식마저 회미해졌다.

이런 분단체제는 남과 북 모두에게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형태의 발전을 가져다 주었다. 우선 북에서는 전쟁이 끝난 후 그 동안 동지였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숙청되었다. 박헌영·이승엽 등의 남로당 계열이 이른바 '미제간 칡과 공화국 전복음모'를 이유로 가장 먼저 노동당에서 축출되었고, 1956년에는 '8월 종파사건'을 계기로 연안파로 불리는 사람들이 축출되었다.

그렇게 되자 이제 김일성에 버금가는 무게를 지닌 정치지도자는 아무도 없었다. 모든 권력이 김일성과 만주항일빨치산 세력에게 집중되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당과 대중, 지도자가 하나로 통일된 일사불란한 체제가 구축되었다. '주체사상과 수령의 영도 아래 전 사회가 하나로 통합된', 이를하여 '주체사회주의'라고 불리는 북한의 독특한 체제였다.

그 북한식 사회주의는 1990년대 들어와서 전면적 위기와 파탄 상태를 맞이하였다. 그 원인은 비효율적이고 관료적인 북한사회의 문제점, 40년 동안에 걸친 미국의 경제봉쇄와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 그리고 대홍수와 같은 천연재해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서 일어난 것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북한체제의 자체 모순에 의해 나타난 것이었다.

북한체제 내부의 근본적인 개혁과 변화 없이는 지금의 현상을 타개할 수 없다는 점만은 분명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변화와 개혁이 가능할지도 미지수이고, 설령 변화를 꾀할지라도 북한이 제대로 지탱할 수 있을까 의문시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북한체제는 '자주를 지키기 위해 너무도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셈이다.

남한에서는 전쟁이 끝난 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중도적 성향이나 진보적인 정치세력도 사라졌다. 오직 반공만이 절대선이었고, 통일방안에서도 승공통일 외에는 어떤 주장도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었다. 이승만 정권 아래서 일어난, 평화통일을 주장했던 조봉암의 처형과 진보당 사건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또한 전쟁은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남한에서도 군대를 엄청나게 거대한 집단으로 성장시켰다. 전쟁이 끝난 후 남한 군대는 60만 대군으로 불어나 있었으며, 당시의 조건에서 군대는 가장 교육과 훈련이 잘된 집단이 되었다.

이와 함께 경찰, 관료기구, 정보기관, 사법기구 등의 온갖 국가기관들도 "전